

언론개혁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양식 연구*

김연중**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본 연구는 언론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온 3대 언론사 <조·중·동>의 언론개혁 보도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언론이 언론개혁에 대해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변호해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언론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구체적 증거 없이 당위성이나 명분론만 구성했던 면이 적지 않았던 탓에, 본 연구는 이들 신문의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가 어떻게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연구방법은 보도량과 기사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언론기사의 보도행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언론개혁은 어떻게 구성되고 묘사되었는지를 담론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담론분석이란 언론이 한 사건을 보도할 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론개혁에 관한 보도를 언론개혁, 개혁 주제, 개혁 정책 등 3개의 중심 시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각 언론들이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언론이 바라보는 언론개혁에 대한 전반적 특성을 찾아보았으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언어적 표현 분석을 통해 보다 상세한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키워드: 언론개혁, 조·중·동, 프레임, 담론분석, 편파보도, 왜곡보도, 뉴스

* 본 논문은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으며,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개혁 대토론회(2004.7월)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 보강한 것임, 심사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 2000yon@dankook.ac.kr

1. 서론

1) 언론의 속성

누구나 자신의 입장이 궁지에 몰리거나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개혁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개혁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몇몇 언론사의 경우, 그 대응이 필사적일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개혁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외적 신뢰도나 영향력은 물론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외부로부터 시도될 때 저항은 전사적으로 나타난다. 사주나 사원이 예외일 수 없다. 자사의 위기가 곧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것은 맹목적 애사심이거나 감정적 대응 차원만은 아니다. 사주 또한 개혁에 저항하라는 특명을 내렸을 리도 없다. 오히려 이데올로기론자들이 주장하듯, 부지불식간에 공유된 공통의 가치와 이해가 일관되거나 결집된 형태로 힘을 발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집단에 대한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집단 구성원들의 총체적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더구나 그 대상이 언론사인 경우 그 반발은 간단치 않다. 언론은 마음만 먹으면 객관성을 담보로 여론을 형성하여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지지층을 규합할 수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마음대로 전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매체 자체가 자사의 홍보수단은 아니기 때문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언론은 보도를 통해 어떡하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하고 지지층 규합을 시도하며, 동조자의 입을 빌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쓰곤 한다. 신문제작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취재기자나 데스크, 편집자가 갖는 시각이나 가치관, 태도는 보도의 내용이나 형식에 광범위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한 신문의 논조나 색깔은 그렇게 결정된다.

2) 언론의 현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는 절대로 제약해서는 안 될 영역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때 언론은 사실을 기초로 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보도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권력을 감시하고 주요 의제를 설정하며 사회여론을 수렴하여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론이 독립적이며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많은 언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검증된 바 있다. 언론보도의 주관성이나 사실 왜곡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뉴스연구에서 다음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뉴스가 사실전달(reporting news)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실(construction of reality)이라는 주장으로 터크만(Tuchman, 1978)의 *Making News*란 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즉 뉴스는 재구성되는 현실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전달 메커니즘에 따라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되어 뉴스의 게이트키퍼 이론(gate-keeping theory)과 편집(editing)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언론매체에 등장하여 독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수많은 게이트키퍼들이 자신의 주관과 시각에 따라서 뉴스구성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신문 편집과정에서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현재화된다는 것이다(손석춘, 2001). 가령 하나의 사건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얼마만큼의 뉴스가치를 지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 어떤 지면에 어떤 크기로 처리할 것인지 등은 뉴스제작과정에 개입하는 게이트키퍼들의 가치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게이트키퍼에 의한 뉴스 선택, 배열, 강조 및 확대, 축소와 배제 등은 뉴스가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이론은 뉴스프레임과 담론이론을 들 수 있다. 프레임(Framing)은 언론에 의한 사건보도의

틀짓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언론의 이야기 구성방식을 말한다. 갠슨과 모디글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에 의하면 프레임이란 특정이슈와 관련된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심적 견해 혹은 그 이슈를 구성하는 중심적 견해라고 정의된다. 즉 하나의 사건의 중심주제가 무엇이나를 찾아내기 위해 미디어가 무엇을 강조하느냐를 말한다. 프레임 분석이 언론이 하나의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담론분석은 이러한 시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강조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뉴스에서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를 통해 뉴스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뉴스가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하며 사실 그 자체일 수 없다는 것을 이와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보면, 뉴스보도에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머덕(Murcock, 1989)은 뉴스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지지하기 위해 그들의 중심적 가치에 맞춰서 재구성되는 현실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틀린(Gitlin, 1980)은 언론이 지배적 자본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강조한다. 허만과 촘스키(Herman & Chomsky, 1988)는 지배계급에 속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의 이념을 생산, 전파하는 선전도구일 수밖에 없으며, ‘소유권’, ‘광고수입’, ‘출입처의존도’, ‘반공주의’, ‘미디어 비평’ 등 다섯 가지 여과장치를 통해 의도적으로 뉴스를 걸러낸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심훈(2004)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을 보도할 때, 정부소식통과 대북 강경론자들의 목소리들을 기사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철저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때리기식 보도를 일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패런티(Parenti, 1995)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거대독점언론이 정보를 왜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한다. 첫째, 특정 정보를 축소하거나 묵살하는 방법(suppression by omission), 두번째는 표적을 정해 공격하고, 파괴하는 보도행태(attack and destroy the target), 세번째는 특정인이나 집단

에 부정적 수식어를 붙이는 ‘이름붙이기(labeling) 보도양식’, 네번째는 ‘추측보도(preemptive assumption)’, 다섯번째는 ‘중계식 보도(face-value transmission)’, 여섯번째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보도할 때 지배층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집중 보도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은 외면하거나 축소해버리는 ‘본질 외면식 보도(slighting of content)’, 일곱번째는 ‘가식적 균형(false balancing)’ 보도, 여덟번째는 집권층이 싫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자세한 소식을 알려주지 않는 식의 ‘회피 보도’, 아홉번째는 틀짓기식(framing) 보도 등이다. 김승수(2003)는 패런티가 제시하는 언론의 보도 경향에 세 가지를 더 보태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벌어졌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묻거나 캐지 않는 것과 다른 하나는 ‘위기조장 보도’ 그리고 ‘호전적 보도(militaristic journalism)’를 들고 있다. 즉, 지배적 의견이나 정보에 대립되는 것은 ‘위기’, ‘불안’, ‘혼란’ 등의 부정적 개념으로 연결하고, ‘적’으로 결정된 나라, 인물, 사상 등에 대해서는 비난과 공격을 퍼붓는다는 것이다.

박용진(2004)은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패런티가 말하는 이러한 메시지 조작방법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배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내용을 묵살하거나 회피하는 것, 그리고 파병강행이라는 강자의 논리를 아무런 비판 없이 중계식으로 보도하고,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도 파병을 강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침묵하고, 파병반대론과 강행론의 가식적 균형을 통해 마치 객관적 보도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파병강행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미 대세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을 강조하는 틀짓기(framing)가 동원되며,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추측보도로 인한 오보의 양산,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이슬람 문명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딱지붙이기, 적개심의 고양을 통한 호전적 보도태도 등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언론이 파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론보도 양태는 언론개혁에 관한 보도태도에서도 예외일 수 없

다. 오히려 자사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언론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응원군을 확보해 저항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언론개혁의 바람이 몰려오는 시점에서 《조선》 등은 IPI 등 국제적 기구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언론개혁이 언론탄압이라며 거센 저항을 했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언론개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최근의 상황을 중심으로 언론이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고자 어떻게 해왔는지를 지면을 통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언론개혁은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구체적 실례 없이 당위성이나 명분론만 무성했던 면이 적지 않았다.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나 시민단체 들도 해당 언론이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보도를 일삼아도 체계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그러다보니 언론은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자신과 견해를 같이하는 지지자를 확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해오기도 했다. 그 결과 독자들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보도만을 보고는 언론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때론 혼란만 가중된 채,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본 연구는 언론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중·동>, 즉 《조선》, 《중앙》, 《동아》 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개혁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나 태도가 어떻게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시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언론보도였으며, 특별히 4·15총선 이후에 나타나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눈여겨보았다.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공공연히 언론개혁을 당의 핵심과제로 밝히는 등 총선전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신문지면에 나타난 보

도만을 대상으로 한 탓에, 언론개혁에 대한 언론사 내부의 대응전략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등은 본 연구의 관심을 벗어나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언론사의 문제의식이 언론기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그 대응 방식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보도량과 기사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언론기사의 보도행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언론개혁은 어떻게 묘사되고 구성되었는지를 담론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담론분석이란 언론이 한 사건을 보도할 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개혁에 관한 보도를 언론개혁, 개혁 주제, 개혁 정책 등 3개의 중심 시각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각 언론들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몇 가지 프레임으로 형상화 시켜보았다. 이를 토대로 언론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았으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언어적 표현 분석을 통해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본고의 목적이 언론의 대응방식을 살펴보는 데 있는 만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론개혁에 대한 언론사의 대응방식을 설명해보았다. 각 언론사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은 아니지만, 언론사별로 언론개혁과 관련된 뉴스프레임을 구성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이 된 기사자료는 언론재단의 '카인즈'를 활용하였으며, '언론개혁'이라는 단어를 검색용어로 사용, 직간접으로 검색된 기사 전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검색대상에는 포함되었지만 언론개혁과 전혀 상관없는 기사, 가령 이 달의 기자상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언론개혁시민연대의 대표인 경우 등은 제외하였다.

3. 언론개혁과 언론

분석에 앞서 언론의 언론개혁에 대한 대응사를 간단히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언론이 그간 어떤 태도로 언론개혁에 대처해왔는가는 오늘의 분석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지만 그나마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1996년 신문지국 판매원 사건¹⁾이후 ‘언론개혁 시민연대’²⁾가 출범하면서부터였다. 본격적으로는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언론개혁문제를 거론하면서 촉발되었다. 이후 2001년 3월 30일 시민단체가 결성한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출범하여 정기간행물법의 개정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언론은 정부의 세무조사를 언론탄압기도라고 비난하였으며, 한나라당은 언론개혁이라는 시나리오가 여권이 수립한 언론대체 문건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언론개혁을 김대중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로 치부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언론개혁은 법적 규제 등 타율적 개혁보다 언론계의 자율적인 개혁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2001년 7월 신문고시 실시가 공표되자, 신문시장의 3/4을 차지하고 있던 과점신문들(조선, 중앙, 동아)³⁾은 권력과 시장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맹렬히 신문개혁에 저항했으며, 신문과 시장의 개혁을 요구하는 일부 신문들 및 정부와 전면전을 벌였다. 《조선일보》 등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성명서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인용, ‘김대중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등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언론개혁의 방향을 끊임없이 호도했다. 또한 언론개혁의 의도에 대해 음모적 시선을 거두지 않았으

-
- 1) 96년 경기도 고양시의 조선과 중앙지국 판매원들이 신문관측 경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한 지국원이 피살당한 사건. 과도한 신문판매 경쟁의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됨.
 - 2) 41개 단체가 모여 결성하였으며, 언론개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정간법 개정과 언론발전회 구성을 요구함. 이후 시민단체는 ‘신문개혁국민행동’, ‘언론개혁국민행동’ 등의 이름으로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어왔음.
 - 3) 2004년 봄, 언론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조,중,동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은 75.2%에 달함.

며, 개혁 주체에 대한 시비는 물론 그들이 행하는 여타의 정책에 대한 시비조차도 공격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언론개혁의 본질은 점차 오도되어 버렸으며, 언론개혁이란 아젠다는 언론탄압으로 바뀌어갔다.

언론개혁에 대한 가장 집요한 저항은 언론개혁과 김대중 정부의 실정을 연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의 실정을 마구잡이로 보도함으로써 언론개혁 주체의 정당성을 훼손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개혁을 친김대중-반김대중 구도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언론개혁을 과거 언론탄압의 역사적 경험인 언론과 정부의 대립구도로 가져감으로써, 언론이 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쉽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론개혁에 대한 이 같은 지속적 저항은 급기야 언론개혁의 실종으로 이어졌다.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에 상당량의 지면을 할애하고 이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해버린 것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시선 또한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오랜 동안 지속되어온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통제의 그림자가 여전히 언론개혁 취지에 대한 의심의 눈길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자기 개혁에 소홀했던 김대중 정부의 실정이 연이어 들춰지면서 언론개혁은 여론의 지지를 잃은 채 혼미 속으로 빠져들어 버렸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시작한 언론개혁은 시간적으로도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의 언론개혁은 기회를 잡았으면서도 그것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대선과 더불어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언론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은 무산되고 마는 등, 신문고시의 부활이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언론을 개혁코자 한 김대중 정부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처음부터 언론에 대한 투쟁을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언론개혁 정책을 보여주진 못했다. 다만 기자실 개방, 브리핑 시스템 전환 등 기존의 취재 관행을 개선하는 정도로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었다. 거대

야당과 주요 언론의 현실적 영향력 탓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언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정적으로 편집 전달함으로써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였고, 그 결과 언론개혁의 선봉을 사전 제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다시금 언론개혁이 도마에 오른 것은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부터였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2004년 4월 21일 당의장 취임사에서 17대 국회의 개혁과제 가운데 언론개혁을 1순위로 꼽았고, 그로 인해 언론개혁은 다시 재추진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정부 밖에서는 200여 시민단체가 연대한 ‘언론개혁국민운동’이 출범하여 언론개혁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국민운동’은 신문고시강화 등 신문시장 정상화, 가칭 신문법 제정, 방송의 사용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는 것 등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언론개혁법안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⁴⁾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중·동>이 언론개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가는 지난 몇 년간의 언론개혁 논쟁 과정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언론사들은 끊임없이 언론탄압이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 꾸준한 저항을 계속해왔다. 시기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언론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였으며, 점차 언론 개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논의가 옮겨갔고, 최근에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면 방송도 함께 하자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4) 2004. 9월 21일. 언론개혁국민운동은 ‘신문 등의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담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로 옮겨가게 됐다. 시민단체의 언론 관계법 입법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2000년 11월 언론개혁시민연대 이름으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데 이어 2001년 10월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8개 신문시장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4. 분석결과

1) 전반적 특성

기간 중 <조·중·동>이 언론개혁과 관련 보도한 기사량은 총 120개였다. 언론사별로는 《조선》 36, 《중앙》 43, 《동아》 41개로 나타났다.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언론개혁이 39.2%, 정치/개혁 35.8%, 방송개혁 12.5%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표 1> 참조), 기사유형을 볼 때, 해설/논평 기사가 전체 58.4%, 스트레이트 뉴스가 34.2%를 차지했다(<표 2> 참조).

기사의 논조나 방향이 언론개혁을 어떤 시각에서 서술하였는가를 언론개혁에 대한 서술논조에 따라 비판-중립-옹호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전체 가운데 비판조가 37.5% 중립이 60.8%로 나타났다<표 3>. 기사의 중심인

<표 1> 주제별 기사분류

	언론개혁	방송개혁	정치/개혁	대통령/여당	안티조선/ 동아	판결
조선일보	12(33.3)	8(22.2)	7(19.4)	2(5.6)	3(8.3)	3(8.3)
중앙일보	16(37.2)	2(4.7)	22(51.2)			1(2.3)
동아일보	19(46.3)	5(12.2)	14(34.1)	1(2.4)	1(2.4)	1(2.4)
계	47	15	43	3	4	5

선거/선거방송	언론발전	계
1(2.8)		36(100)
	2(4.7)	43(100)
		41(100)
1	2	120

()는 백분율.

<표 2> 기사의 유형별 분류

	스트레이트	해설/논평/ 내부칼럼	외부칼럼	인터뷰	여론 조사	서평	계
조선	11(30.6)	19(52.8)	3(8.3)	1(2.8)	2(5.6)		36(100)
중앙	13(30.2)	23(53.5)	2(4.7)	4(9.3)		1(2.3)	43(100)
동아	17(41.5)	17(41.5)	6(12.2)	1(2.4)			41(100)

물이나 단체가 누군가를 살피본 결과는 여권/열린우리당이 48.3%를 차지했으며, 노무현대통령/정부가 18.3%, 그리고 노사모/시민단체 등이 10.8%, 그리고 방송/방송위가 9.2%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⁵⁾ 기사의 월별 게재건수를 보면 5월이 50%, 6월이 29.2%로 나타나,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을 재추진하면서 기사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표 3> 기사의 논조/성향

	상대비판	중립	(상대)인정	자기긍정	
조선	23 (63.9)	11(30.6)		2(5.6)	36(100)
중앙	6 (14.0)	37(86.0)			43(100)
동아	16 (39.0)	25(61.0)			41(100)

<표 4> 기사의 중심인물/단체

	노대통령/정부	열린우리당/여권	한나라/민주당	노사모/시민단체	한겨레
조선	7(19.4)	14(38.9)		6(16.7)	1(2.8)
중앙	7(16.3)	23(53.5)	3(7.0)	1(2.3)	
동아	8(19.5)	21(51.2)		6(14.6)	

방송/방송위	여론	국회/여야	기타	계
6(16.7)	2(5.6)			36(100)
1(2.3)		3(7.0)	5(11.6)	43(100)
4(9.8)		1(2.4)	1(2.4)	41(100)

<표 5> 월별 기사게재 분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조선	1(2.8)	3(8.3)		5(13.9)	20(55.6)	7(19.4)	36(100)
중앙		2(4.7)	2(4.7)	6(14.0)	24(55.8)	9(20.9)	43(100)
동아				6(14.6)	16(39.0)	19(46.3)	41(100)

5) 기사의 주제, 유형, 논조, 중심인물 등에 대한 분석은 수집된 전 기사를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서 정리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재분류한 것으로,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코딩 유무를 설정하지는 않았음.

위의 조사항목을 언론사별로 나누어 보면, 《조선》이 전체 36건 가운데 12건(33.3%), 그리고 《동아》가 41개 가운데 19건(46.3%)을 언론개혁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은 언론개혁보다는 정치/개혁 등 포괄적 주제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22/43건, 51.2%)(<표 1> 참조).

<조·중·동> 3사의 가장 큰 차이는 기사의 보도성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조선》은 전체 기사 36건 가운데, 23건(63.9%)이 비판적 톤을 유지했으며, 《동아》는 41건 가운데 16건(39%), 《중앙》은 43건 가운데 6건(14%)만이 비판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의 경우는 전체 기사의 86%(37/43건)이 중립적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조동과 나름대로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기사의 중심인물은 언론개혁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여권/열린우리당이 압도적 1위로 드러났고, 그 다음은 노대통령/정부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렇게 볼 때, 언론개혁에 대한 《조선》, 《중앙》, 《동아》 3사의 전체적인 시각은 중립이 주류를 차지하면서도 비판적 입장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표에서 읽을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는 5월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중·동> 3사의 차이는 기사의 주제, 종류, 등장인물 등 전체 흐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각이나 논조를 보면 《조선》, 《동아》는 명시적으로 또 언어적 표현에서도 매우 비판적임을 드러내고 있고, 《중앙》의 경우도 외형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 시각에서 기사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도내용 분석

기간 중 언론이 언론개혁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도했는가는 프레임 추출을 통한 담론구성 방식, 표현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프레임이란 메시지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거나 강조하거나(Entman, 1991) 수용자가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스키마라고 할 수 있는데(Goffman, 1974), 언론사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축소하거나 정보제공을 자신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특정한 시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뉴스 프레이밍, 즉 담론구성 방식을 잘 살펴보면 언론이 어떤 구도를 가지고 사건을 구성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전달하고자 어떤 식으로 언어적 표현을 구축했는가를 알 수 있다. 기간 중 관찰된 프레임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했던 주제별 기사분류를 재검토하여, 언론개혁, 정체성, 정책이란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분류의 근거는 분석기간 중 언론개혁에 관한 대부분의 뉴스들이 위의 3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즉, 대부분의 관련 뉴스는 언론개혁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제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으며(언론개혁), 언론개혁 주체에 대한 의구심과 정당성 시비에 상당한 량의 기사가 할애되어 있었고(정체성), 언론개혁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보도(정책)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항목에 따른 언론보도의 담론구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담론구성(프레이밍)

① 언론개혁

언론개혁 자체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은 조사기간 동안의 대표적 안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언론개혁 초기인 2001년에 단골메뉴로 수없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개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조사기간 동안 <조·중·동> 공히 나타내고 있었다.

《조선》의 경우, 언론개혁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언론개혁이란 “비판 신문이 주도하는 신문계를 재편하기 위해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려는 것”(5/3/02)이라거나, “비판신문이 주도하는 신문시장을 재편하려는 시도”(5/26/02)라는 설명을 꼭 붙이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강제로라도 재편하겠다는 것”(5/31/08)이라고 규정한다. 때로 언론개혁은 신문규제로

등치되기도 하는데, 6월 1일자 '방송규제, 신문자율의 이치'를 보면 "총선이 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연이어 강력한 언론개혁 의지를 보이고 여당은 워크숍까지 하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신문규제를 준비하느라 열심이다. 그것이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들을 찍어 누르려는 것임을 알 만한 국민은 다 안다". 따라서 언론개혁은 그 "관련법안의 모양새가 드러나면 세계 언론학자들은 민주국가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신문규제 시도에 놀랍고 황당한 시선을 보내게 될 것"(6/1/31)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만큼이나 언론개혁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나타내고 있는 《동아》의 경우,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언론개혁은 "언론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4/24/05)라고 정의한다. 《중앙》의 경우, 언론개혁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언론개혁에 대한 냉소적인 입장이나 폄해를 군데군데 드러내고 있다. 가령 "여당 일부에서 언론개혁이니 뭐니 하여 다시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만……"(중 5/4/35)이라거나 "언론개혁을 한 다니 제4부까지 코드 입맛으로 바꾸려는가"(중 6/01/27)라고 표현함으로써 언론개혁을 나라를 분열시키는 대수롭지 않은 갈등 가운데 하나 정도거나 코드 정치적 발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그 예이다. 특별히 《중앙》은 언론개혁의 부당성을 주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강조하고 있는데, 선진외국에서는 신문사가 여러 매체를 소유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일부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신문이라는 단일매체에 대한 시장규제는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독일의 경우, 언론자유는 기본적으로 신문기업의 자유라는 판결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소개하고 있다(중 4/22/04).

언론개혁 주제에 대한 시비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조선》은 여론조사를 인용, "국민들 다수는 언론개혁을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조 6/27/29) 주장한다. 정간법의 주요 쟁점인 언론사주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도 "언론도 기업인 만큼 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도 "언론개혁의

주체는 누가 바람직한가”란 질문을 소개하고 그 답이 ‘현업언론인’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다(6/10/08).

《동아》는 외부칼럼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여당이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5/21/07)며, 언론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의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개혁의 원칙과 절차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헌법은 언론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는 여론시장의 독과점, 여론의 편향을 자저오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중앙》은 ‘언론개혁의 대원칙, 시장의 손에 맡겨주라’(4/21/21)란 기사에서 허친스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언론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언론개혁의 시기에 대해서 《동아》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언론개혁은 시민단체나 국회가 먼저 거론하면 모를까 정부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4/19/03)이라거나, 문희상 특보의 인터뷰를 인용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국회개혁부터 차분하게 풀어가야지 언론개혁은 우선순위가 아님”을 지적함으로써(동 5/26/04) 언론개혁 시기의 부적절함을 강조한다. 《조선》의 경우도, 정의채 신부의 강연을 인용, 언론개혁의 순서에 대해서는 “먼저 편향적인 TV매체부터 공공성에 근거해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조 6/28/02)고 주장한다. 《중앙》의 입장은 다음 글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변화를 하지 말고 개혁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개혁이고 변화냐가 중요하다. 이 시절에 무엇이 가장 시급한 것이며, 그 시급한 것을 위한 변화와 개혁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먹고사는 일이다”(5/12/30)로 박자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중·동>이 구성하고 있는 언론개혁 담론은 비판신문이 주도하는 신문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이며, 이러한 잘못된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는 결과적으로 여론시장의 독과점, 여론의 편향을 불러오게 되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다. 더구나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과제이지 언론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 정체성

언론개혁 주체에 대한 부정적 묘사 및 정체성 흔들기는 언론개혁 보도의 핵심적 담론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언론사는 스스로를 ‘비판신문’이라고 자칭하는데 비해, 개혁주체인 상대는 친노세력으로 규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개혁의 주체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친노세력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 친노세력은 끊임없이 소수로 묘사되고 정당성이 없음이 강조된다. 그 소수의 성향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열린우리당 내 일부의원들과 친노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었는데, 대통령도 공개언급을 시작한 셈”(조 6/8/06)이라거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민단체이다”(조 5/22/30) 등이 그것이다.

때론 상대방의 폭력적 언어를 여과 없이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얼마나 비이성적이며 파괴적인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조선》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집회 가운데, 김영삼 KBS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여과 없이 중계하고 있는 것이 그 예로 들 수 있다. “미친놈은 패 죽이는 것이 과거의 상식이라며 조선일보가 제자리를 찾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옛날 방식이 맞다”거나 명계남 씨의 발언 “언론개혁과 《조선》 박멸에 힘을 쏟아야 할 것”(4/22/06) 등을 중계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상대를 폭력적 비이성적 집단으로 묘사하고, 자신을 이성적 피해자로 인식하게 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동아》는 6월 8일자 6면, 기명칼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적어도 자유민주국가의 지도자와 정부라면 언론의 감시와 평가, 제안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나라에 그리고 권력 자체에게도 불행을 안길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젠 지겹다”고 쓰고 있다. 대통령의 언론개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보수언론이 사사건건 개혁의 발

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으로는 논란의 본질을 볼 수 없다. 언론의 비판을 몸에 좋은 쓴 약으로 알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여유가 아쉽다”(동 6/19/02)고 충고하고 있다.

언론개혁단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김재홍 당선자의 경우, “언론개혁과 관련해 당론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검토 등 민감한 문제를 줄곧 제기해 골치 아픈 존재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동 5/29/05)고 묘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언행은 당 내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된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만 같아 딱해 보였다”(동 5/31/06)고 그린다.

시민단체는 “주관적 잣대로 억지를 부리는 조직”이라거나(동 4/15/10) 특별히 방송개혁을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방송은 “저질편파프로그램이 판을 치는 곳”(동 6/4/06)으로 묘사한다. 그리하여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방송과 시민단체는 진작부터 박자가 맞아왔고”(조 5/22/30), “집권당 실세와 친 정권 언론, 시민단체들과 한 무리를 이루어 매일, 매주 언론개혁을 읊어대고 있으니, 그 개혁의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느 국민이 모르겠는가(조 5/22/31)”라고 호소한다. 반면 거대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스스로를 ‘비판신문’이라며 연약한 피해자로서의 처지를 읊소하기도 하는데, “아직 (권력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마지막 축인 사업부와 제4부로 불리는 언론 중에서도 일부신문 뿐”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조 5/22/30)

방송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기사에서 KBS는 “방만한 경영을 해온 주제에 언론개혁을 읊어대는 조직”으로 묘사되며(조 5/28/25), KBS 노조에 대해서는 “입만 열면 소위 언론개혁, 정확하게는 정권을 대신해서 비판적인 주요 신문들에 대한 증오와 공격에 열을 올리는 집단”이라고 규정한다(조 5/26/27).

③ 정책

언론개혁 주체에 대한 담론구성의 핵심은 언론개혁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며, 그 방법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 그리고 주도 세력의 손발이 얼마나 맞지 않는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들 언론이 보는

언론개혁은 능력 부족, 비일관성, 무모함, 정책 혼란, 목표불분명 등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동아》 5월 24일자는 “준비 안 된 대통령의 본파정치. 실체를 알 수 없는 개혁, 모든 일을 땀질식으로 처리” 등으로 정부정책을 묘사하고, “인기 영합적 정책추진, 집단의 힘을 앞세우는 ‘떼 법’ 등이 모든 법을 압도하는 분위기”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다. 심지어는 그의 임기 시작이 2년째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를 벌써부터 강조함으로써 그의 영향력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은연중 강조한다. 《중앙》은 5월 12일자 “묵직한 정치, 묵직한 정치인”이란 기사에서 “총선 대승 이후 집권당은 중구난방으로 개헌론, 개각론, 파병재검토론, 언론개혁론 등을 쏟아내고 있다”며, “언제 어떤 연구를 얼마나 했기에 이런 국가 중대사를 이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까 싶다”고 의문을 제시하고 “요즘 정치를 보면 많은 경우 가볍고, 깊은 속이 없어 보인다”고 일갈한다.

때론 정책을 주도하는 여당 내부의 분란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중앙》은 6월 4일자 ‘열린 우리 某의원 姜장관 우리랑 붙자는 거냐, 건교부 관계자 여론 의식 이제 와서 탄소리’란 기사에서 “여권의 정책혼선이 예사롭지 않다. 이제야 개별 정책에 대한 이견 수준을 넘어 범여권 내 보혁갈등 양상까지 보인다”며, “언론개혁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 사이는 물론 당내에서도 앞뒤 안 맞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쓰고 있다. 《동아》는 ‘시민단체, 정부에 정 때가-주요정책 일방추진 실망’에서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대다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개혁 현안에 대해 보조를 맞춰왔지만, 최근 이 같은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리크 추가 파병 결정 등에서 볼 때, 정부가 다수여당의 힘을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는 어떤 교감도 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19/27).

《중앙》을 보면, ‘개혁당 출신, 우리는 여당 속 야당’이라는 기사에서, 당의 노선에 갈등이 있다면서, “소위 언론개혁의 문제에 관해 당초 정의장 등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혁당 일부에서 언론개혁이야 말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반발한

탓에, 당 지도부에서도 올해 안에 언론개혁을 한다는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개혁당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지킴이 성격으로 발족했던 정당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5/6/04). 또한 <중앙>은 5월 12일자 4면 ‘세대 교체 가속예고’ 제목하에 열린우리당의 당의장 선거를 평가하면서, “이해찬 의원의 속도조절론은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천정배 의원의 강경한 대혁신론에 밀리고 말았다”며, “그동안 주로 후방에서 역할을 한 천의원이 전면에서 부상하면서 독자적 발판을 마련한 세 사람이 동반자에서 경쟁자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등 적전분열을 예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이들 언론은 언론개혁의 객관적 중립성 정당성을 평가절하하고 언론개혁이 곧 언론 길들이기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언론개혁이 소수 친노파에 의해 주도되는 무리한 주장이며 합법적 정당성이나 절차도 무시한 것이라 주장한다.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손발도 맞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덧붙여 시급한 민생문제나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고 이런 무리한 언론개혁을 한다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임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내용이나 운영이 엉망인 방송이 언론개혁을 앞장서 주장한다면 개혁을 할 것이면 방송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담론구사는 언론개혁이 범시민사회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노사모 중심의 일부 친노 단체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 그리고 정권을 대신해 비판언론을 공격해온 일부 방송노동자 등에 한정된 것으로 규정, 국민은 물론, 시민단체 내에서의 평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노세력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언론개혁 대응방식

위에서 분석한 담론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중·동>의 언론개혁에 대한 대응방식을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들의 대응방식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거나 명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이들 언론이 언론개혁에 대해 꾸준하고도 일관되게 선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응방식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특별히 무리가 따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조·중·동>의 언론개혁 대응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이들 언론은 원칙과 명분에 기대어 언론개혁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자유는 헌법적 권한이라거나 독자의 알권리 또는 천부인 권리라는 등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면 언론개혁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진리' 수호의 차원에서 구축된다. 국가권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특별히 객관적 진리론이 저항의 무기로 자리잡기 적합한 토양을 지니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에 의한 언론탄압의 기억을 갖고 있는 대중에게 언론탄압이라는 구호는 강력한 무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언론은 특별히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정책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원칙적 담론구사는 언론개혁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거나, 나아가 진리를 왜곡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위기론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둘째, 자사 중심적 시각의 보도행태를 들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대개 자기 위주, 자기 입장 옹호의 편파보도로 나타난다. 가령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확대하고, 불리한 것은 축소하거나 생략해 버리는 방법이다. 기사의 배경이나 원인 등을 생략해버리는 것도 그러한 보도경향 가운데 하나이다. 가령 <조·중·동>의 경우,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언론개혁 국민연대 출범 등의 뉴스는 기사거리로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언론개혁이 신문시장의 '얼룩' 정도로 축소 묘사되는 경우도 있다. 《동아》는 6월 8일자 6면에서 신문의 힘은 국민인 독자에게서 나온다고 하며, 경품제공 등 판촉문제에 따른 공정거래 질서는 지켜져야 하지만, 과연 신문시장의 이런 '얼룩'을 국가 최우선 개혁 과제라고 할 만하냐라고 반문하면서 언론개혁을 고작 '얼룩' 정도로 축소해 버리고 있다.

반대로 자사의 입장에 따라 직접 개입을 피하고 관찰자의 입장을 표방하기도 하는데, 《중앙》의 경우, 방송개혁 문제에서 스스로를 중립자의 자리

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유보해 버리고 있다. 5월 26일 ‘한나라 “방송개혁하자”, “공영방송 민영화 앞장…… 편파성 막을 것”이란 기사를 보면 조선, 동아의 공격적 태도와 달리 한나라 당을 인용하여 “열린우리당이 신문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자 한나라당은 방송개혁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며 스스로 중립자의 위치로 돌아서 버린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중앙》의 경우 방송개혁에 대해서, 또 KBS에 대해선 어떤 직접적 공격도 볼 수가 없다.

셋째는 상대에 대한 비방, 조롱, 나아가 적극적 공격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 아젠다를 제시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상대 흠집내기, 또는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여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 특별히 추론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가령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의 집중포화에 노출되었는데, 이는 개혁주체를 공격함으로써 언론개혁의 예봉을 꺾어놓겠다는 심사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개혁주체에 대한 편가르기 방법도 흔히 동원된다. 가능하면 상대의 힘이 집약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번 분석기간 중 언론개혁 문제의 주요 공격 대상은 노 대통령과 개혁주체인 열린우리당, 그리고 행정 정책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조·중·동>은 그의 발언에 대한 시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여당원들에 대한 공격도 같은 맥락으로 읽혀졌다. 최근 발생한 정동채 문화부 장관관련 청탁 사건에서 보면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친노매체 사장 부인 교수 임용 정동채 장관이 차관 통해 청탁’이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사설제목 또한 ‘남은 청탁했다 해서 목숨까지 끊게 하고’라고 붙였으며, ‘청와대 정교수 진정서 일주일간 방치’라는 기사를 추가했다. 《중앙》은 청와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정교수의 반박을 같은 크기로 배치함으로써 청와대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의혹이나 추론을 사실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언론 개혁 주체의 힘빼기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넷째는 여론오도 또는 여론몰이의 보도행태를 들 수 있다. 흔히 나타나는 방식은 여론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최근 노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퇴진운동으로 받아들인다’는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는 긴급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기민함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안전을 던지고 그에 대해 묻는 형식으로 이미 선점된 아젠다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빈번한 여론조사와 의도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식의 보도는 전형적인 여론몰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우군확보 및 지원군에 의한 반격이다. 이러한 예는 외부 필자에 의한 기고문 활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외부 기고의 경우, 언론은 필자의 주장이 자사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단 자사의 지면에 실렸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고 청탁과 게재 과정에서 언론이 자발적 선택권과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필자 선정 시 언론은 자사입장에 우호적인 인사를 편향적으로 선택하거나 반대로 배치되는 인사에게 청탁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우군의 잦은 지면 선점은 보도 방향을 특정 좌표로 향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각 언론사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목소리가 높은 필자들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는 이른바 물 타기 전략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신문개혁을 방송에까지 확산하자는 것인데, 《동아》는 ‘굳이 시비를 걸려면 일부 신문보다 훨씬 심하게 국민 공유의 전파를 독과점하고 있는 방송부터 건드릴 일’이라며, ‘방송이 우선이 아니라면 언론개혁의 속내가 딴 데 있다’고 주장한다(6/8/06). 이런 주장은 방송사나 방송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개혁 시기의 부 적절성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경제가 급박하니 그것부터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5. 결론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신화를 갖고 있다. 언론의 영향력은 이런 신화에 기반을 두고 행사된다. 하지만 언론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나 눈높이에 맞추어 뉴스를 선택하고, 배열한다는 것에 이의를 두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능하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기사가 편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내면적 가치나 주장이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독자 또한 이런 심각한 왜곡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념적 주장이나 가치들은 기사 내면에 구석구석 녹아 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이 기사는 왜곡이고, 저 기사는 편견이라는 구분을 해가며 신문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독자는 언론이 그려주는 일상적 프레임을 따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그림을 형성하게 되고 그 그림에 맞추어 매일 전달되는 작은 조각들을 끼워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때, 언론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는 매우 중요해진다. 본 연구가 프레임을 통해 언론개혁이란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살펴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언론은 언론개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보도했을까. 본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였다. 정확히 말해 본 논문은 <조·중·동>은 언론개혁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도를 생산해왔으며, 그 과정과 방식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언론개혁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 행태는 거시적 담론구성 차원이나 미시적 차원의 표현이나 묘사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것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란 주장은 아니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한 집단의 구성원은 서로가 공유하는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레 언론보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언론보도로 살펴본 <조·중·동>의 언론개혁 대응방식은 사전 계획 없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독립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가지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수렴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언론개혁이라는

소용돌이에서 자신의 신변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언론이 속성상 지면구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뉴스 역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Herman & Chomsky, 1988; Tuchman, 1991).

이렇게 볼 때, <조·중·동>을 보고 언론개혁을 이해한 사람들은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기 어려웠으리라 판단된다. 언론개혁이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의 행태가 못마땅해 노무현 정부가 무턱대고 저지르는 위험한 행동 정도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실 또는 사실의 왜곡은 분석을 통해볼 때,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우리가 살펴본 <조·중·동> 어느 언론들에서도 언론개혁에 관한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이나, 언론개혁 주창자들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자의 눈으로 해석되고 걸러진 이야기만 선택적으로 전해질 뿐이다. 이러한 일방적 정보전달이나 선택적 왜곡은 기사 곳곳에서 행해진다. 언론개혁의 주체를 언급하면서도 부정적 수사를 동원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의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런 예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원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들 언론은 공정함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일방적 주장을 하거나 자사의 입김을 강화 또는 보강해주는 기고자들에게 지면을 할애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사의 입장을 도와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든 보도내용과 과정을 통해 볼 때, 적어도 언론개혁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언론지면이 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언론개혁이 뜨겁게 논의되던 그때처럼 무차별적으로 자사의 입장을 변호하는 글로 도배되진 않았지만 언론개혁에 관한 한 <조·중·동>의 태도는 때로 완곡하게, 때론 거침없이 신랄할 정도의 비판으로 일관했다.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확인하면, 언론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사회가 온전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고 그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책임은 외면한 채, 자신의 이해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지면을 자의적으로 전용한다면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개혁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일부 언론은 여전히 본분을 망각한 채 이런 역기능을 저지르고 있어,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 사회의 어떤 개혁도 어렵다고 한다. 언론개혁 문제에서 바라본 일부 언론의 보도양태는 언론개혁 주창자들의 견해가 특별히 틀리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언론개혁이라는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에서 중립적이거나 공정한 보도태도를 보여주기느커녕, 편파적, 일방적 보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언론개혁이 실시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보더라도, 대응방식이 정당하거나 성숙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거나 이상을 저버린 채 자사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 왜곡을 일삼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비추어보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또한 언론이 과연 국가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여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고 비판을 주도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울 뿐, 국민 분열을 조장하거나 도리어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것에 대한 대응방식이란 오해를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언론 개혁주도세력에 대한 공격을 피부어 스스로 개혁의 칼을 거두게 한 전력이 바로 이 같은 분석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다.

정부와 국민을 나누고 나라를 극적인 대치형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 언론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 나날이 독자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몰고 가는 신문은 종국적으로 독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론 등 정보원이 다양해진 지금, 언론

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으로 자사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언론개혁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 그것에 대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언론이 인정해야 할 자신의 잘못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보도를 내보낼 때, 비로소 독자들의 지지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언론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또 독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참고문헌

- 김승수 (2003). 미국 언론권력의 왜곡보도와 시민 민주주의의 저항. 『인물과 사상』, 60, 38~49.
- 박웅진 (2004).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 방송보도의 문제점 분석」.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 언론개혁국민행동, 2004년 7월 2일.
- 손석춘 (2003). 『신문읽기의 혁명』 개마고원.
- 심훈 (2004). 1995년 북한기아에 대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분석: 허만과 촘스키의 프로파간다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1), 57~82.
- 임동욱 (2002). 「신문개혁운동에 대한 평가」. 언론개혁운동, 2001년 평가와 2002년 전망, 언론개혁 시민연대 토론회, 2002년 2월 19일.
- 조정환 (2002). 정보화와 덕·저항의 진리모델, 규범모델, 그리고 욕망모델을 넘어서. 『문화과학』, 30, 95~114.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ve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Herman, E. S. & Chomsky N. (1988). *Manufacturing Consent*. New York: Pantheon Books.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urdock, G. (1989). Critical activity and audience activity. In B. Dervin, L. Grossberg, B. J. O'Keefe & E. Wartella(Eds.), *Rethinking Communication*, 2, Paradigm exemplars (pp.226-249). Newbury, Park, CA: Sage.
- Parenti, Michael. (1995). Methods of Media Manipulation. form the book of 20years of Censored News by Carl jensen and Project Censored. <http://www.thirdworldtraveler.com/Media/>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 Free Press.
- Tuchman, G. (1991). Media institutions: qualitative methods in the study of news. In K.B. Jensen & N.W. Jankowski(Eds.), *A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pp.79-92), London: Routledge.

(최초 투고 2004.09.01., 최종원고 제출 2004.10.16)

A Study on the News Coverage of Three Major Newspapers about the Press Reform in Korea

Yon-Jong Kim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three major newspapers covered the press reform movement in Korea. Despite that the NGOs and Korean government keep trying to reform the market and structure of the newspapers, the targeted newspapers argue that they are unjustly accused of the dominance of the press market made by the readers' choice.

Using frame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news coverage on the press reform for 6 months and revealed that these major newspapers presumed to be targeted were totally challenging against the press reform by means of framing of news and using news discourse. The ways of challenge were, firstly they appealed to the readers that the press reform is the press suppress so that they have to fight against this unacceptable pressure. And secondly, they report the news selectively for their own interests by elaborating, magnifying, or reducing the facts. Thirdly, they attack the government policies and major figures leading the press reform by letting the outside columnists favorable to their own standing point. And finally, they conduct the poll on and off and report what they want according to their self interests.

Keywords: press reform, framing, discourse, news analysis.